

# 국내 거주 외국인의 재난안전 취약성에 관한 연구: 정보요구 사항에 대한 심층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n Disaster and Safety Information Needs for Foreigners in South Korea

Younhee Kim<sup>\*\*</sup>, Hyeon-Suk Lyu<sup>\*\*\*</sup>

Childcare Center Safety&Insurance Association, Hangang-daero, Yongsan-gu, Seoul, Korea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0th Floor Sangnok Building 459 Eonjuro Gangnam-gu Seoul  
135-706 Korea

## Abstract

Recently South Korea has experienced a number of catastrophic disasters. These ever-increasing disaster threats reflect not only a lack of government disaster capacity but also it reveals the vulnerability of certain groups of the South Korean populations whose demographic or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may place them at greater risk of harm before, during, and after a disaster. These groups are often called 'disaster vulnerable groups'. The total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South Korea has reached over 1.5 million and is rapidly increasing. However, due to the language barrier and socio-cultural unfamiliarity, these foreigners are also regarded as a disaster vulnerable group, yet, the Korean disaster and safety policies and considerations for foreign immigrant families and migrant workers have just begun to be developed. As a result, they seem to be by and large excluded from the disaster and safety information provision and other disaster prevention education and training activities altogeth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hat kind of disaster and safety information these foreign settlers would require and in which ways and channels they prefer to access it. It then

---

\* 본 연구에 활용된 심층인터뷰 자료는 2011년 방재연구소에서 수행한 '외국인 대상 재난대비 콘텐츠 개발 및 홍보대책'의 연구결과에서 발췌·인용한 것임을 밝힙니다.

\*\* The 1st author. Tel. +82-2-6902-2481. Fax. +82-2-6902-2453. E-mail. younhkim@gmail.com

\*\*\* Tel. +82-2-2007-0685. Fax. +82-2-564-2153 E-mail. hyeonsuklyu@gmail.com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Nov. 24, 2014 / Revised: Dec. 14, 2014 / Accepted: Mar. 20, 2015

further explores to what extent they are willing to participate in education and training for disaster prevention and safety prevention activities often organized and initiated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or these purposes, this study adopts an intensive interview method. Based upon the findings, the study identifies the key problems and policy issues according to four themes. These findings can be used as basic resources to inform future government disaster and safety policies for foreign immigrant families and migrant workers. Additionally, it contributes to the nascent academic literature of migrant populations and disaster management.

**Key words:** foreign residents, disaster and safety information & contents, disaster vulnerable group

### 국문초록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는 2014년 현재 이미 150만 명을 넘어섰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정착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재난안전에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논문은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한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겪었던 재난 경험,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필요한 정보유형, 그리고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방식에 대해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를 설정하고, 면접 대상자를 선정하여 심층인터뷰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후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네 가지 영역에 걸쳐 핵심주제를 도출하고, 관련된 이슈와 쟁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재난안전정보 정책 및 콘텐츠 개발, 그리고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주제어:** 국내 거주 외국인, 재난약자, 재난안전정보 및 콘텐츠

## I. 서론

국내 거주 외국인은 결혼, 노동, 관광, 유학 등 다양한 목적으로 그 유입이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2014년 7월 현재 이미 150만 명(국민일보, 2014)을 넘어섰다. 급증하는 국제결혼, 내국인의 3D 업종 기피 심화 및 출산율 저조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외국인 노동력의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면, 결혼이주 외국인과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유입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최석현, 2013; 이현심, 2014).

한편 최근 들어 마우나리조트 사고, 세월호 참사 등 대형재난이 급증함에 따라 ‘재난안전’이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전반의 중요한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재난안전정보와 콘텐츠 제공이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재난안전 사고 대비 정보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정부의 재

난안전 관련 기관이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국내 거주 외국인 22명을 심층인터뷰한 후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재난안전정보 정책 및 서비스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 1.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주

최근 외국인 노동자 및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이민자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는 급격히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지난 2014년 7월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의 전신)에서 발표한 ‘201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통계를 보면 국내 거주 장기체류 외국인, 귀화자 등 외국인 주민의 수는 총 1,569,740만 명으로 집계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1,219,188명으로 전체 외국인 주민의 7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외국인 노동자는 538,586명, 결혼이민자는 149,764명, 유학생은 80,570명이다. 외국 출신 한국 국적 보유자는 146,078명(9.3%), 외국인주민 자녀는 204,204명(13%)이다. 성별은 남성이 810,131명(51.6%), 여성은 759,339명(48.4%)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843,655명(53.7%)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인이 185,470명(11.8%)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크게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한 ‘결혼이주민’으로 구분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내국인이 되더라도 흔히 일컫는 ‘다문화가정’을 이루게 된다. 2008년 3월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정을 “결혼이민자와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에 의해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이 혈연주의에 근거해 다소 협의적으로 정의한다(류현숙 외, 2012: 135-165). 반면, 일부 연구자들은 다문화가정을 결혼이나 국적 등의 문제와는 무관하게 대한민국 문화권이 아닌 다른 문화권 출신 가족 구성원을 포함한 국내 거주 가정이라는 광의로 정의할 것을 제안한다. 이 경우 다문화가정은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노동자 가정, 북한이탈주민(이하 ‘새터민’) 가정 등을 모두 포괄한다(김명성, 2009: 5-29).

여기서 새터민을 다문화가정에 포함시켜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다분히 논쟁적이다. 새터민이 분단 이후 언어·문화적으로 남한과 유리된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이들이 겪는 새로운 언어, 가치관, 생활양식 등이 여타 외국인이 겪는 문화적 충격이나 압박과 동일하며, 소수자로서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생존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원숙연(2008), 윤인진 외(2009), 정병호(2004) 등은 새터민을 해외 이주민집단과 동일 범주에 포함시킨다(방재연구소, 2011 재인용).

본 연구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다문화가정 구성 주체인 결혼이민자와 함께 이주노동자까지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본 연구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언어 등 문화 차이로 인해 내국인과 다른 정책적 배려를 필요로 하는 광의의 다문화가정에 해당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 일

체를 연구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주노동자, 즉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혹은 근로자; 이하 노동자로 통일)의 경우 국내 장기 체류 및 생활 상 언어 등 문화 차이로 인한 적응 문제에 있어 결혼이민자와 동일한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수적으로도 결혼이민자보다 많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다만 광의의 다문화가정에 포함해야 할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하는 새터민의 경우, 이들이 지닌 언어 등 문화 차이가 (남)한국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결혼이민자나 외국노동자 등 여타 국가(또는 타 문화권) 출신 외국인들과는 정도나 특성, 특히 학습능력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sup>1)</sup>, 이들을 다문화가정에 포함시키는 문제가 학계에서도 현재까지 논란이 있다는 점, 정부 역시 새터민을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주민 중 어느 범주에도 포함되지 않는 특수한 집단으로 간주하여 이들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주에서는 제외한다.

## 2.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선행연구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연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크게 이주노동자 관련 연구와 결혼 이민자 관련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국내거주 노동자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이들의 수가 급증하기 시작한 1992년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했다(이정환·이성용, 2007). 1990년대 초에는 주로 외국인 노동자 유입과 노동력 활용이 우리 노동시장이나 경제에 미치는 효과 및 이와 관련한 정책연구가 대다수였다(박영범, 1992; 박래영, 1993; 송병준, 1993; 이해경, 1994; 김이수, 1998).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따른 이들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강수들, 1996). 이후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들의 급증과 함께 이들의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들의 한국사회 및 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함한희, 1997; 장준오, 2002). 2000년대 접어들면서부터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복지, 인권, 법적지위 등 이들의 국내 적응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등의 수도 증가하면서 이들 단체에 관한 연구 등 연구주제 및 연구 분야가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김희경, 1995;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2; 설동훈, 2002; 이광택, 2004; 설동훈, 2005; 정진경, 2005; 박명호·권장수, 2005; 김정효 외, 2006; 최영신, 2007; 김승대, 2009; 한승준, 2011; 박진완, 2012; 최영신·강석진, 2012; 김종열 외, 2013). 2000년대 후반기부터는 이들 노동자의 근로여건뿐만 아니라 여가생활과 삶의 질, 또는 삶의 만족도에 초점을 둔 연구(이주연, 2011) 및

1) 이와 관련해 새터민의 경우 어휘나 문화에 차이는 있으나 본질적으로 문법 등 언어 구조면에서 우리 국민과 같은 언어를 구사한다는 점, 문화차이 역시 국내 입국 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착, 교육, 취업 등의 초기정착 지원을 받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은 통일부 산하 '하나원(정식명칭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하우스'로, 1999년 7월 8일 경기도 안성에 개원한 통일부 소속기관)을 통해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고 일정 정도 한국 사회에 대한 개괄적 정보 및 지식을 얻기 때문에 이들이 느끼는 언어, 사회, 문화적 괴리감은 일반 외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갈등 해소 차원에서의 연구(전영평·한승준, 2006)도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이 외에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의 동향을 분석한 메타연구가 진행되기도 했다(이정환·이성용, 2007). 그러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재난안전 관련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국내에서 시행된 국내 거주 외국인 정책은 대부분 다문화가정 중심, 특히 여성 결혼 이주자(이하 ‘결혼이주여성’) 중심의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 다문화가정 및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초기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 및 정착을 지원하는 차원의 정책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총리실 산하의 정책연구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김기홍 외, 2001; 김승권, 2010; 김유경, 2008; 마경희 외, 2011). 주로 홀로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달리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는 결혼, 가족, 임신, 출산, 양육, 이혼 등 일반가정과 마찬가지로 다차원적인 복지 서비스와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변화순 외, 2008; 정광호 외, 2009; 장재열, 2011; 김승권 외, 2010; 어수진, 2011; 장현주, 2011; 최연실, 2011; 류현숙 외, 2012; 박종대·박지혜, 2013). 이들 연구의 공통된 결론은 한국의 다문화주의 정책이 대체로 ‘관(官) 주도’의 경향을 띠는 것이다.

이외에도 사회통합방안으로 다문화주의 이론 및 정책에 접근한 연구들(구건서, 2003; 윤인진, 2008; 한승준, 2008; 김영성, 2009)을 비롯해 다문화 이주여성의 폭력피해를 비롯한 차별 및 인권보호 관련 연구(오세연·곽영길, 2010; 장진숙, 2010; 김성찬·김유정, 2010; 정현미, 2010; 김운영·김정규, 2013)도 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다문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관한 이들 연구는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접근하는 관점과 달리 결혼이주여성의 범죄 피해 ‘취약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결혼’이라는 특수 상황에 따라 빈발하는 국적취득 애로 및 이혼 증가 문제 등의 법적인 주제를 다루는 연구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 등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및 양육 지원 정책연구(조혜영 외, 2007)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결혼이주여성 대상 결혼생활 만족도 연구(그레이스정·임지영, 2011; 허철행, 2012) 등도 상당수 진행했다. 최근에는 결혼이주여성의 취업(공수영·양성은, 2014) 및 건강, 여가생활 등을 다루는 연구(김경화·최정혜, 2011)도 등장하는 등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 대상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재난안전 연구는 거의 없다.

### 3. 국내 거주 외국인과 재난약자 정책

재난 취약성(vulnerability)의 개념과 관련해 가장 보편적으로 인용되는 연구는 WHO(2002)가 제시한 정의와 Wisner, *et. al.*(2004)이 기술한 내용이다. 특히 재해 자체 보다는 특정 인구집단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천착한 와이즈너 외는 취약성을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 또는 그들이 처한 상황이 이들의 자연재해 영향의 예측, 대응, 저항 및 복구역량을 제약하는 것(2004: 7)”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Weisner, *et al.*, 2004: 7). 이러한 재난관리 역량의 취약성 개념에 착안해, 세계은행(World Bank), 유엔재해경감기구(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국제적십자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등의 국제기구는 물론, 미국 재난안전청(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및 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등에서는 공통적으로 ‘재난약자’를 재난 대비, 대응, 복구에 있어 제공되는 기본 장비를 안전하고 자유롭게 다룰 수 없는 사람으로서, 육체적·정신적 장애인(시각, 청각, 인지 지체), 해당지역의 언어(주로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지리적·문화적 고립자, 노숙자, 심신 허약자 및 어린이 등을 포괄하여 정의하고 있다.

지진, 화산분출 등 자연 재난, 재해를 빈번히 겪는 일본에서는 일찍이 ‘재해약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재해약자’란 재난 사고 발생 시 재해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등의 구호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고령자, 장애인, 빈곤층, 유아, 임산부, 외국인 등이 이에 포함된다(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3).

국내 학계 역시 재난약자를 “자신이 위험에 처한 경우, 그것을 인지하는 능력(위험관찰능력), 위험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정보입수, 발언 능력), 그러한 위험에 대해 적절한 행동을 취할 능력(행동능력) 등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칭한다”고 정의(이은애, 2008: 29-32)하는 등 재난 발생 시 개인의 재난 대응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재난약자 또는 재난취약계층이라고 불리는 개인 및 집단은 재난이 야기하는 위협요인으로부터 쉽게 피해를 입거나, 받은 피해로부터 복구행위가 어려운 사람 또는 계층을 지칭한다.

이러한 재난취약계층 또는 재난약자의 범주에는 고령자, 장애인뿐만 아니라 입원중인 환자, 이해능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한 영유아, 빈곤층, 또한 자신의 출신국이 아닌 거주국가의 재해정보나 지리정보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언어장애’ 및 ‘문화적 차이’를 겪고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은 언어소통 및 문화의 차이로 인해 재난약자의 범주에 속하며,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계층이다.

이러한 국내 거주 외국인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난안전정책의 일부에 포함시킨 것은 근래의 일이다.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2항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에 해당할 경우 긴급지원대상자가 된다. 동 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이란 첫째,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중인 사람, 둘째,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셋째,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 넷째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다섯째,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이에 따르면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은 특례 대상자가 되어 재해 대응 및 복구

과정에서 긴급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소방방재청에서 수립하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 역시 2011년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재난지원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동 지침에서는 외국인에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자 즉,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실제 출국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자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4. 재난안전정보와 국내 거주 외국인

정보는 인간의 모든 행위, 판단, 선택의 핵심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재난 또는 안전사고의 희생자나 희생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이 경험하는 사고의 원인, 규모 등에 대한 상황 정보나 인식을 갖지 못할 경우 위험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더 큰 피해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보의 부재와 이로 인한 불확실성(uncertainty)은 이들 희생자들의 스트레스와 공포감을 확산시켜 집단패닉현상을 초래함으로써(Ehrenreich, 2001:53) 견잡을 수 없는 대형재난으로 변질 수도 있다. 즉, 재난은 위해(hazards) 자체가 야기하는 피해와 위해 요인에 대응하지 못하는 인간의 무능력(inability)의 결합으로 초래되는 일체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Cardona, 2003; Manyena, 2006, 류현숙, 2010).

또한 재난안전 사고의 예방과 복구를 책임지는 재난안전 당국 및 유관기관 실무자들 측면에게도 재난안전정보는 효과적인 재난관리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재해와 재난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활동을 계획하며, 피해(가능) 지역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파악해 복구나 지원에 필요한 인력, 자원, 장비 등의 조달 방법을 강구하는 데 있어 정보는 핵심자원이 된다(Vakis 2006: 8).

국제적으로 재난관리 및 구호 활동을 지속해 온 국제적십자자연맹은 효과적인 재난 정보관리가 재난 대응 및 구호에 있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2015). 정보는 사람과 자원을 움직이는 신호(signal)이자 규칙(rule)이기 때문에 재난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리 전 과정에서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 및 전달, 조정, 각계각층의 참여, 모니터링, 평가 등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재난정보의 중요성을 재난관리 단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조기경보를 통해 인명구조에 기여할 수 있고, 둘째, 재난 발생 시 피해 지역과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해 적재적소에 구호물자 및 복구 장비와 구호 및 복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대피 장소나 시간 등의 정보를 전달해 피해 규모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셋째, 각종 미디어를 통해 재난 피해 지역 및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전 세계에 공유함으로써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과 부조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역시 피해 현장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 모두에게 신속,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다(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2015). 단적으로 피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위치나 상황에 관한 정보가 있어야 시의적절한 물적, 인적 도움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복구와 구호

등에 참여하는 정부, 재난안전 유관 단체들, 미디어, 그리고 피해 지역 주민들 간 원활한 정보관리 네트워크는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지정하여 업무 혼선과 혼란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협력과 조정을 가능케 한다. 또한, 재난정보는 일반적으로 지도나, 도표 등 쉽고 빠른 이해가 가능한 형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수적인 재난관리에 널리 이용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정보가 재난안전 관리의 가장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정보 자체, 특히 재난안전정보의 중요성 및 역할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그 이유는 재난안전정보가 중요하다는 점이 그저 ‘명백한 사실로 받아들여질(taken for granted)’ 뿐이기 때문이다.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재난안전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연구 역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2012년 WHO의 ‘전미건강기구’에서 발간한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in Disaster Situations in the Caribbean’은 눈여겨 볼만하다(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 2012). 특히 이 발간물의 9장(Support for Vulnerable Groups Following a Disaster)은 재난취약계층을 구분해 각각의 그룹별 특화된 취약성에 따라 재난 및 안전사고 시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도 외국인과 같은 언어적 취약계층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같은 맥락에서 지난해 2014년 12월 일본 NHK Broadcasting Culture Research Institute 소속 Media Research & Studies 팀이 진행한 연구, ‘Information Needs of Foreign Nationals Residing in Japan in Case of Tokyo Inland Earthquakes: From Group Interviews with Foreign Residents from Four Countries’는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는 일본 내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 역시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대지진 당시 재난취약 계층 특히 일본 내 외국인 거주민들이 경험한 ‘정보의 공백(vacuum of information)’에 주목하여, 당시 이들이 자신과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재난안전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전달받은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고통 받았던 경험에 대한 실증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600명의 일본 내 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 조사를 통해 이들이 정보의 부재로 인해 내국인들보다 많은 피해를 입거나 패닉상태에 빠졌던 사실을 밝혀낸다(Yonekura, 2012). 뒤이은 후속연구에서는 일본 내 체류기간이 상당하고 외국인 집단 중 가장 많은 중국인, 한국인, 일본계 브라질인, 필리핀 등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후쿠시마 지진과 관련해 이들의 대비 유무, 지진 관련해 이들이 필요로 했던 정보 및 대피소 등 어떤 정보원(sources)에서 어떤 방법(methods)으로 수집했는지 또, 향후 요구되는 정보 및 미디어 요청사항 등이 무엇인지를 도출했다.

국내연구로는, 2013년 강원대학교(박진찬 외, 2013)에서 수행한 외국인의 재난안전 서비스에 관한 의식조사가 있다. 이 연구는 2013년에 약 2개월에 걸쳐 국내 거주 외국인 110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경험 유무와 안전정보를 얻고 싶은 매체, 재난발생시 신고 및 도움 요청 유무, 재난신고 시 문제점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한국의 재난안전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수준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설문응답자 110명중 98명

이 재난피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해,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내용이 대체로 피상적일 수밖에 없고, 재난 및 응급상황에 대해 알고 싶은 내용 역시 실제 경험에 토대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재난안전정보 요구사항을 구체화 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최근 들어 국내 거주 외국인 역시 재난취약계층이라는 사실이 점차 재난 안전 당국이나 언론 등을 통해 인식되기 시작했고, 이들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은 구체적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반영하기보다는 개괄적인 정책만을 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사고와 관련해 제공받기를 원하는 정보와 콘텐츠에 대한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향후 이러한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정책 입안 시 참고가 될 만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심층인터뷰 개요

본 연구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재난안전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노동자 대상 지원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등을 방문하여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자 모집 및 선정을 위해 접촉한 기관들은 주로 정부나 비정부기구(NGO)에서 운영하는 기관들로,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거나 외국인의 국내거주 행정절차를 돕는 외국인주민센터, 다문화 외국인 대상 한국어나 한국문화 강좌를 개설하여 한국 문화를 알리는 대민 서비스 기관,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 쉼터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나 문화 서비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일단 이들 기관에 전화로 접촉, 연구의 개요를 설명한 후 인터뷰 질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 거주 기간이 길어 한글 이해도가 뛰어난 외국인을 인터뷰 대상자 1순위로, 한국 거주 기간이 짧더라도 한글 이해도가 높은 대상자를 2순위로 선정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일단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 등을 통해 일차적으로 인터뷰 대상자들을 선정한 이후에는 스노우볼 샘플링(snowball sampling), 즉 인터뷰를 마친 사람에게 국내 거주 외국인을 소개받는 방식으로 인터뷰 대상을 추가 섭외하였다. 인터뷰 대상자의 국적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선정된 총 다섯 개의 기관<sup>2)</sup>에서 스물두 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심층인터뷰 장소로는 방문기관의 회의실을 주로 이용했으며, 2011년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총 5일

2) 서울시 역삼 글로벌 빌리지, 안산 외국인 주민 센터, 안산 외국인 노동자의 집, 마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간 러시아, 중국, 일본, 캄보디아, 콩고, 수단, 필리핀, 인도, 네팔 등 다양한 국가로부터 이주한 외국인 스물두 명을 대상으로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대면질의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개인당 약 30분에서 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질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연구수행자를 대동하여 한국어보다는 영어 이해력이 높은 면접자의 경우에는 영어로 질문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통역이 제공되는 기관에서는 질문의 의도를 반복 설명했다. 심층인터뷰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심층인터뷰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구분	국가	빈도	비율(%)
성별	남	5	22.73	출신국	러시아	1	4.55
	여	17	77.27		몽골	2	9.09
한국거주기간	1년~3년 미만	5	22.73		벨라루스	1	4.55
	4년~6년 미만	6	27.27		우즈베키스탄	1	4.55
	7년~9년 미만	1	4.55		이탈리아	1	4.55
	10년 이상	10	45.45		일본	1	4.55
교육수준	고졸 이하	2	9.09		중국	8	36.36
	전문대졸	4	18.18		캄보디아	1	4.55
	대졸	5	22.73		케냐	1	4.55
	대학원졸 이상	2	9.09		필리핀	2	9.09
	무응답	9	40.91		네팔	1	4.55
결혼유무	미혼	1	4.55		인도	1	4.55
	기혼	21	95.45		콩고	1	4.55

## 2. 자료수집절차

심층인터뷰 질문지는 응답자의 일반적인 인구통계학적 정보, 한국에서의 재난피해 경험, 재난안전정보 및 콘텐츠 수요, 정보 전달 방식과 채널, 재난안전 교육훈련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질문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응답 내용이 있을 경우 응답자 본인이 하고 싶은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주요 질문내용은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2012년 WHO의 재난취약계층 대상 정보요구사항, 2014년 NHK 일본 내 거주 외국인 대상 설문조사 항목, 2013년 강원대학교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아래 <표 2>와 같이 재구성하였다.

<표 2> 심층인터뷰의 주요 질문 내용

구분	내용
인구통계학적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에 입국한 연도 및 거주기간을 말씀해주세요.</li> <li>• 귀하의 한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중 어느 부분이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li> <li>• 지금 직업이 있으신지요? 만일 직업이 있으시면 어떤 일을 하시며,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몇 시간 정도 일하십니까?</li> </ul>
한국에서의 재난피해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난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li> <li>• 한국에서 발생한 재난 때문에 피해를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가족, 지인의 경험 및 주변에서 들은 경우나 본 경우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li> <li>• 재난 피해를 경험했을 때 공공기관(주민 센터나 구청 등) 및 주변사람들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제공받고 싶으셨습니까?</li> </ul>
알고 싶은 재난안전정보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약 외국인을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와 관련된 콘텐츠 및 정보를 제공한다면, 어떠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li> <li>• 이러한 재난 및 안전사고와 관련된 교육은 어떤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li> </ul>
재난안전정보 및 콘텐츠 전달방식 및 채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정보를 어디서 얻으십니까?</li> <li>• 한국정부에서는 휴대폰을 통해 재난 및 안전사고 정보를 메시지로 전송하거나 텔레비전을 통해 재난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보를 제공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li> <li>• 만일 제공받으신 적이 있으시다면, 제공받은 정보나 콘텐츠를 읽으시거나 이해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셨습니까? 만일 있었다면 어떤 점이 어려우셨습니까?</li> <li>• 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 콘텐츠가 제공된다면, 어떠한 방식(채널)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까?</li> <li>• 재난안전 콘텐츠 및 정보가 다국어로 제공된다면 어떤 언어로 제공되길 희망하십니까?</li> </ul>
재난안전 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에서 정부가 주도하거나 지원하는 재난대비나 안전관련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li> <li>•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면 직장에서 재난대비나 안전에 관련된 교육을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li> <li>• 외국인 노동자나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재난안전분야 교육을 실시한다면 어떠한 콘텐츠와 내용으로 구성된 교육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li> </ul>

심층인터뷰는 연구자 두 명이 선정된 기관에 방문하여 면대면(face-to-face)으로 진행하였다. 단독 또는 2~3명을 한 그룹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충분한 의견청취를 위해 시간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개별 인터뷰 당 대략 30분에서 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인터뷰 전 응답자에게 녹취 사실을 고지하였으나, 응답자 중 불법 체류 노동자들의 경우 녹음 자체를 기피하였고, 몇몇 이주 여성 응답자 역시 녹취에 거부감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녹취 대신 연구자 한 명은 질문을 하고 다른 연구자는 인터뷰 내용을 기록해 이를 녹취자료 대신 사용하는 방법을 활용했다. 그 이외에는 응답자들에게 동의를 얻어 녹취를 시작했고, 심층인터뷰를 마친 후 최대한 인터뷰 대상자가 사용한 표현이나 용어에 충실하여 녹취 내용을 정리하였다. 녹취가 완료된 후 두 명의 연구자가 녹취내용을 재확인해 연구자의 자의적 해석을 최소화 했다.

## IV. 연구 결과

심층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질적 자료는 내용분석 과정을 통해 인터뷰에 참여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겪었던 재난 경험, 국내 거주 외국인이 요구하는 재난대비 관련 정보 및 콘텐츠, 재난안전정보 및 콘텐츠의 효과적인 전달방식, 재난안전 교육훈련 요구사항 등 네 개의 범주에 따라 고찰하였다.

### 1. 재난 피해 직·간접 경험

심층면접 결과, 응답자들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겪었던 재난피해는 호우로 인한 침수였다. 응답자 중 5명이 본인 혹은 가까운 지인이 침수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집안이 물에 잠길까봐 걱정된다고 응답한 사람은 일곱 명이었다. 폭설로 인한 피해를 겪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두 명이었는데, 이들 응답자는 중국출신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주자들이었고, 주거환경이 반지하인 경우가 많아 침수 피해에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하였다.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그때 우리 집이 반지하였거든요. 근데 하수도가 역류해서 집안의 배수구로 지렁이 같은 벌레들이 올라와서 깜짝 놀랐어요(중국 출신 이주노동자).”

“제 주변에 비가 와서 집에 물이 들어왔다는 사람이 많아요. 친구 오빠 집도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들어와서 이사했어요(중국 출신 이주노동자).”

“비가 많이 오는 날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물이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의 친척집으로 갔는데, 그때 너무 급해서 집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어요(중국 출신 결혼 이주자).”

한편, 우리나라에 살면서 가장 발생이 염려되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는 북한의 전쟁 발발 위협을 꼽았다. 면접 대상자중 총 여섯 명이 북한의 도발로 인한 전쟁발발을 한반도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으며, 그 다음 홍수나 태풍으로 인한 침수, 교통사고, 폭설, 화재의 순으로 위험하다고 응답하였다.

“저는 한국에서 북한 때문에 전쟁이 날까봐 두려운 마음이 커요(콩고 출신 결혼 이주자).”

“결혼해서 한국에 오기 전에도 북한 관련 뉴스가 많이 나와서 북한 때문에 전쟁이 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어요(몽골 출신 결혼 이주자).”

“홍수 관련 내용이 자주 뉴스에 나와서 여름에 비가 오면 걱정돼요(콩고 출신 결혼 이주자).”

“저의 시택은 시골인데요,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지으세요. 근데 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비닐하우스가 무너졌어요(필리핀 출신 결혼 이주자).”

“제가 집에 없을 때 불이 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예요(몽골 출신 결혼 이주자).”

이 밖에도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피력한 외국인도 있었다. 이 인터뷰 참여자는 한국에 다양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그 범죄의 희생양이 주로 어린아이들인 것 같아 많이 속상하고 두렵다고 말했다.

“뉴스를 보면 무서운 범죄가 한국에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중에서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요(일본 출신 결혼 이주자).”

## 2. 제공받고 싶은 재난안전정보 및 콘텐츠

국내 거주 외국인들 역시 한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재난을 이미 경험했거나 앞으로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재난에 대비하여 어떠한 내용이나 정보를 제공받고 싶은지 질문하였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와 ‘재난 발생시의 대처 요령’에 대한 정보 요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침수나 지진 등 자연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및 대피 장소에 대한 정보와 이러한 정보를 동영상, 그림, 만화와 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 자료 형태로 제공받고 싶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갑자기 다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응급처치 요령이나 방법을 쉽게 알 수 있게 그림으로 된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집 냉장고에 붙여두면 좋을 것도 같고(중략)(중국 출신 결혼 이주자).”

“평시에 무슨 물품을 준비해 놓아야 재난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케냐 출신 이주노동자).”

“우리 아이가 학교에 다녀서 가끔씩 가정통신문이 오는데 생활안전에 대한 내용도 있거든요.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되더라고요(중략)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으면 좋을 텐데(필리핀 출신 결혼 이주자)...”

또한 한국에서 재난이나 안전사고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특히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구호제도나 이재민 제도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 구체적으로, 법과 제도 차원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으로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복구지원 등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해 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제도가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중국 출신 이주노동자)”

“외국인 지원제도 같은 것에 대해 알고 싶어도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고(네팔 출신 이주 노동자)…”

아울러, 다국어로 제공되지 않는 현재 재난안전 분야의 제도 및 정책들에 대한 정보도 제공받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다.

“재난관련 지원제도에 대해 알고 싶은데, 주민 센터에 가도 한국어 책자 밖에 없고…(중략)(일본 출신 이주 근로자)”

한편, 상당수의 인터뷰 참여자들이 언어소통에 대한 어려움도 호소하였다. 많은 응답자들이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119에 전화를 걸어야 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119에 전화 후 정작 상황설명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호소하였다. 119를 이용해 본 이용자는 전체 응답자 중 두 명이었는데, 본인이 하는 말을 119응답센터에서 알아듣지 못해 무척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몇몇 응답자들은 119 이외의 다른 응급전화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상세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알고 싶다고 말했다.

“정말 필요할 때 어디로 전화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119 밖에 모르는데 다른 전화번호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전화번호들을 알고 싶어요(캄보디아 출신 결혼 이주자).”

응급환자 발생 시 비상약 구입에 대한 어려움도 호소하였는데, 어떤 구급약품을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이와 관련해 평시에 준비해야 하는 구급약품 구매 시 도움이 될 만한 단어나 발음기호, 사진 정보 등이 제공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약국에서 비상약을 구입할 때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한국말이 서투른 것은 아닌데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요(이탈리아 출신 결혼 이주자).”

“한국에서 약을 사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본국에 방문할 때 직접 약을 사오거나 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배송해달라고 부탁해요(필리핀 출신 결혼 이주자).”

필리핀에서 간호사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 온 이주여성을 제외하고는 인터뷰 참여자 대부분이 재난 대비 방법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평시에는 재난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진 않지만, 비상시 대피요령이나 응급 처치요령 등은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인터뷰 참여자가 공감했다. 중국에서 이주해 온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생활과 문제가 시급하여 다른 것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고 응답했다. 다만, 이들도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화재사고의

경우에는 사전 대처방안에 대해 숙지하길 원한다고 응답했다.

### 3. 재난안전정보 전달 방식 및 채널

국내 거주 외국인이 필요로 하는 재난안전정보 및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필수조건으로, 대다수 인터뷰 참여자들은 우선 재난안전정보의 다국어 제공을 꼽았다. 또한 이들은 향후 제공될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 콘텐츠 및 정보의 언어로써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가장 많은 중국어나 다수의 외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어 등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언어로 제공될 것을 원했다. 물론 최선의 방법은 모든 외국인이 자국어로 재난안전 콘텐츠 및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겠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물적, 인적 제약이 있을 것임을 인정하면서 최소한 영어 또는 중국어를 통한 정보제공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같이 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일어, 몽골어, 베트남어, 캄보디아, 러시아어와 같은 각자의 모국어로 정보가 제공되기를 희망하였으며, 향후에는 스페인어나 우즈베키스탄, 불어, 이란어의 수요도 예상된다고 응답하였다. 또 다른 희망사항으로는 다국어로 진행되는 라디오방송의 개설 및 해당 채널을 통한 각종 재난정보 및 대비정보 제공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스물 두 명의 심층면접 응답자 모두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그 중에서 재난 안전 정보문자<sup>3)</sup>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일곱 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휴대폰을 통해 재난 안전정보문자를 전송받았던 일곱 명 중 여섯 명은 자신이 받은 문자의 내용이 너무 어렵고, 빠르게 적혀 있어서 읽을 엄두가 나지 않아 삭제했다고 답변했으며, 다른 한 명은 발신처를 몰라서 문자를 보지 않고 삭제했다고 응답했다.

“너무 뻑뻑하게 작은 글자로 문자가 와서요. 단어도 너무 어렵고...(중략)(중국 출신 이주노동자)”

현재 제공되는 재난안전정보의 제공 채널로는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의 정보기술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주자 모두 인터넷 상 출신국 커뮤니티를 자주 이용하며, 이러한 자국 커뮤니티에 재난안전정보 제공 사이트의 주소가 링크되어 있으면, 접속률과 이용률이 높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즉, 자신들의 본국 커뮤니티 사이트를 한국 생활의 적응을 위한 참조 매체(reference media)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정보 및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국정부의 웹사이트가 자신들이 속한 커뮤니티에 링크되어 있으면 재난안전정보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자주 이용해서 정보를 찾는 편이에요. 이런 재난안전정보가 있는 특정 웹사이트가 있으

3)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발송하고 있는 Cell Phone Broadcasting System(CBS)을 통해 발송되는 재난안전정보 문자를 지칭한다.

면 좋을 것 같아요(콩고 출신 결혼 이주자).”

만약 재난안전정보나 콘텐츠가 다국어로 제공되는 웹사이트가 있다면 이에 접속해서 보겠다는 의견도 많았다. 인터넷을 통해 재난안전정보 및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 이외에 제시된 방법으로는 재난안전 정부부처나 기관의 홍보 브로슈어 등 인쇄물을 통한 접근이나, 직접 강의를 통한 콘텐츠 전달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재난안전정보가 담긴 브로슈어가 제공된다면, 집에 항상 비치해 두고 필요시 참조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재난안전 기관에서 제공하는 브로슈어를 받으면 냉장고에 붙여서 두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중략)  
(중국 출신 결혼 이주자)”

또한 이러한 인쇄물을 게시 및 비치할 장소로는 각 국가별 커뮤니티나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종 외국인지원센터, 다문화가족센터, 외국인 주민센터, 외국인 쉼터, 대사관 등을 제시하였다.

만약 재난안전 정보 제공을 위해 정보기술을 사용할 경우, 정보 접근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한국사회 적응 및 정보 교류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센터를 거점으로 재난안전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정기적 강연을 한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특히 동영상이나 그림 등 멀티미디어 요소를 활용해 보다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한 정보를 얻기를 희망하였다.

“동영상이나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는 팸플릿이 제공되면 유용할 것 같아요(러시아 출신 결혼 이주자).”

“센터를 직접 방문해 일 년에 몇 번이라도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필리핀 출신 결혼 이주자).”

앞서 인터뷰 대상자가 언급한 것처럼, 대다수의 인터뷰 참여자들이 자신들이 자주 찾는 외국인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재난안전 관련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받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재난안전 관련 교육·훈련

스물 두 명의 응답자 중 열 세 명이 한국정부에서 주관하는 재난대응이나 안전교육에 직접 참여 또는 본 적이 있거나 주변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중 네 명은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는 현장을 목격했으나, 당시에는 어떤 상황인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사이렌이 울리고 갑자기 모든 차들이 멈춰서니 무슨 일인가 싶어서 너무 신기했어요. 사람들도 건물 안으로 막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게 민방위훈련이었군요(인도 출신 결혼 이주자!)”

안전교육과 관련해서는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 한 명이 노동자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으나, 교육 내용이 실질적인 재난안전보다는 건설현장에서의 사고대응책에 관한 것이라 건설업과 무관한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다문화 강사 등으로 일하고 있는 여섯 명의 여성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재난 발생 시 대피요령을 배웠다고 공통적으로 응답하였지만, 훈련 내용 자체는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응답하였다.

“사이렌이 울리고 나서 건물 지하로 내려가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할 때 계속 한국어로 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지하로 이동해서는 모인 사람들끼리 웃고 이야기하다가 다시 사무실로 올라왔어요(인도 출신 결혼 이주자).”

응답자 중 단 한 명만이 직접적으로 재난훈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자녀와 함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민안전체험관에 다녀왔다고 했다. 방문 전에는 안전체험관 인터넷 신청이 너무 복잡하고 한국어로 신청해야 하는 등4) 복잡한 신청절차가 불만이었는데, 직접 다녀온 결과 만족스럽고, 흥미로운 이색 체험이었으며, 재난안전 대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하였다.

## V. 논의

본 연구에 참여한 심층인터뷰 응답자 대부분은 재난안전 분야에 대해 대체로 생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이들 외국인들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주제가 아닌 탓으로 짐작된다. 또, 타국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각종 일상적인 문제 해결이나 경제력을 갖추는 것이 최우선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난 및 안전사고와 같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비상상황까지 대비할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풀이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국내 거주 외국인 대부분이 재난안전 사고와 관련해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어디에서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들 국내 거주 외국인이 재난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이로 인한 피해에 노출될 확률이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재난안전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인터뷰 참여자들

4) 서울시민안전체험관 사이트 확인결과, 체험관 소개 페이지는 영어로 제공되나 예약신청 버튼은 퀵메뉴 내부에 한국어로 표기되어 있고, 예약신청 버튼을 누르면 신청페이지가 영문이 아닌 한국어로 표기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국내 거주 외국인이 예약신청을 직접 수행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응답자들이 알고자 하는 재난안전 관련 정보나 콘텐츠의 주요 내용은 크게 재난 발생 전·후의 요구사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재난 발생 전에 알고 싶어 하는 주요 정보 및 콘텐츠로는 재난 발생 시 대피요령, 집이나 활동 범위 내에 존재하는 근거리 대피소의 위치 및 가는 방법, 평소 재난에 대비하여 어떤 물품을 준비해두어야 하는지가 주요 관심사로 꼽혔다. 특히 이들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침수, 폭설, 화재 등에 관한 사전 대비 요령 등의 정보 수요가 컸다.

한편, 재난 발생 후의 주요 관심사로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각종 복구 관련 서비스와 정책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인터뷰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이미 제공되고 있는 정부의 각종 서비스 정책이나 정보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면, 119 신고 시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다국어 통역서비스의 경우, 현재 한국관광공사와의 연계성을 통해 제공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인터뷰 응답자 대부분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재난안전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 수혜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나 방법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재난안전정보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제고하려는 우리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아직까지 미흡하며,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다른 정보접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즉, 보다 효과적으로 외국인 대상 재난안전정보 및 콘텐츠를 전달하는 새로운 방법, 구체적인 채널 등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심층인터뷰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재난안전정보 접근을 저해하는 가장 주된 장애요인으로는 이러한 정보들이 대부분 한국어로만 제공되고, 아주 드물게 영어로 된 정보가 추가적으로 제공되어 대다수 외국인들이 설사 해당 정보에 접근했다 해도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이번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응답자 대부분이 재난안전정보 콘텐츠에 대한 다국어 제공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영어로 된 정보를 기본으로 제공하되, 한국어 거주하는 외국인의 인구비율별로 다국어 재난안전 콘텐츠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의 상시적인 재난안전정보 접근과 관련해 드러난 또 다른 정책적 쟁점은 단순한 국내 거주 외국인과 내국인(선주민) 사이의 정보격차가 야기하는 실질적 문제만이 아닌, 이들이 정보 공백 내지 무지로 인해 갖게 되는 위협 인식, 즉 공포감 및 불안감이 증대된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앞서 소개한 동일본 대지진 경험 외국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 있으나, 이미 국내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외국인 역시 미디어나 주위에서 접하게 되는 여러 재난 소식으로 인해 한국을 ‘재해 및 재난사고가 많은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들의 공포 및 불안감이 현재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난안전 정책이나 제도는 물론 재난안전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에 대한 무지로 인해 더욱 증폭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일상 상황에서도 이들에게 부정적인 인식과 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맞춤형 재난안전 정보 전달 체계 및 홍보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이번 심층 인터뷰 응답자들이 제시한 평시 재난안전정보 및 콘텐츠 획득을 위해 가장 적합한 채널

이나 방식으로는 다국어가 제공되는 웹사이트를 통한 접근이 가장 많았다. 실제 결혼이민자나 합법 이주노동자의 경우 인터넷 이용률이 높은 편인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13년에 조사한 ‘주한 외국인 부문 인터넷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2세에서 59세 주한 외국인 중 90% 이상이 이동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 대부분이 자국의 커뮤니티를 인터넷 상에 독자적으로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평시 한국에서의 생활과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은 이러한 자국민의 독자적 커뮤니티를 통해 국내의 재난안전정책이나 콘텐츠를 제공하면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재난안전 유관 부처 웹사이트와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자주 접속하는 자국의 웹사이트,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를 기반으로 일종의 ‘재난안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

이 외에도 결혼이주자들에게 제공되는 해피스타트 프로그램<sup>5)</sup>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재난안전콘텐츠를 제공받기를 바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주노동자의 경우, 이러한 재난안전정보나 콘텐츠를 한국 입국 후 받게 되는 초기 연수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입국 시에 만화나 그림 위주의 재난안전정보 책자 또는 스티커나 마그네틱을 제공하면 평시에 주방이나 거실 등 자주 손이 가는 곳에 놓고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다.

이번 심층인터뷰 응답자들 대부분 재난안전분야의 교육이나 훈련이 있다면 이에 참가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으며,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재난안전분야 훈련의 명칭, 내용, 시기 등을 알고 싶어 했다. 현행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재난안전 교육 및 훈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서에서 지자체 소재 다문화지원센터의 요청이 있을 시 분기별로 1회씩 심폐소생술 시범 및 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이를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다만, 이번 연구 결과가 시사 하듯 이들 외국인들이 재난안전 교육 및 훈련에 높은 관심 및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갖고 있으므로 향후 이들에게 적합한 참여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재난안전 훈련에 처음으로 참여한 것은 불과 3년 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 2011년 5월, 같은 해 발생한 3월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의 지진해일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반 ‘민방공 공습경보’와는 경보음과 대피 방법이 상이한 ‘재난위험 경보’를 발령해 전 국민 지진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이에 외국인들을 참여시켰다. 당시 국내 거주 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어섰고, 일부 주한외국공관들의 요청도 있어 외국인을 시범훈련 대상에 포함시켰던 것이다. 이때 외국인 지진대피 시범훈련 참여기관으로 서울용산국제학교와 레인보우외국인학교가 선정되어 서울용산국제학교에서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1,200명이, 레인보우외국인학교에서는 터키, 중앙아시아, 영어권 국가의 초, 중학교 학부모 등 140명이 지진발생시 행동요령 교육 및 실제대피훈련에 참여했다

5) 법무부에서 2011년도 7월 1일 이후 입국한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바람직한 다문화가정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코나스, 2011).

이밖에도 정부는 매년 10%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의 국내생활 적응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족을 의용소방대원으로 편입시켜 외국인 119 통역 도우미 및 외국인 노동자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파이낸셜 뉴스, 2014). 또한 대전 소방본부에서는 2014년부터 '119 시민체험센터'를 개칭, 외국인을 포함한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방문해 화재진압, 심폐소생술, 비상탈출 등 재난 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대전광역시 소방본부, 2014). 이렇듯 국내 거주 외국인이 직접 참여하거나 체험하는 방식의 교육, 훈련방식은 이들의 실질적인 재난안전 역량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동료 외국인들에게 재난안전정보를 전파시키고 홍보하는 '정보의 허브(information-hub)'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향후 참여 인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는 단체나 기관을 통한 재난안전 교육 및 훈련 과정 개설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번 심층인터뷰 응답자 대부분이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게 된 결혼 이주자였으나, 한국에 정착한 후 시간제근무 또는 유연근무로 다문화 강사 또는 문화센터 강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응답자 중 40%를 차지하였다. 이들은 본인이 일하고 있는 다문화센터에서 직장교육 프로그램 과정의 일부로 재난안전정보에 관한 강의교육을 받으면 수강생들 사이에서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 VI.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재난안전정보 및 콘텐츠 요구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재난안전정보 접근성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재난안전정보의 제공 및 전달 체계 다각화를 통해 이들의 재난안전 인식을 시급히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제공되고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으로 실시되는 재난안전분야 서비스조차도 이들에게 제대로 인지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이번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만큼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재난안전 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3년도부터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내 거주 외국인도 정부의 복구 및 지원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가 전무하였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복구 및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직접적인 대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재난안전 관련 다양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 전달체계 마련 및 홍보 역시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한 대사관이나 이들이 자주 찾는 장소를

비롯해 온라인상 각 국가별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재난안전 필수 정보나 콘텐츠를 제공하는 소위 ‘찾아가는 맞춤형 전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 재난안전 정보와 콘텐츠는 웹사이트나 홍보 브로슈어, 직접적 강의를 통해 얻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특히 결혼이민자나 합법 이주노동자의 경우 특히 주한외국인의 98.4%가 인터넷 이용경험이 있는 점을 감안해 인터넷을 이용한 재난안전 분야 정보 전달을 향후 중요한 정책 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이미 개발된 콘텐츠와 현행 제도 및 정책을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충분히 알리는 것만으로도 보다 나은 재난안전 대비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계절별 재해 대처법, 비상시 대피방법, 응급의약품 구입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세이프티 퍼스트 앱(Safety First App)’을 출시한 것은 고무적이다. 이 앱은 기존에 한국어로만 제공되던 재난안전정보를 일본어, 중국어(간체), 영어, 베트남어로 제공하며, 재난 발생 시 비상대피소와 외국인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비상약품의 경우 한국어 발음 및 그림을 제공해 이해를 돕는 것이 특징이며(경향신문, 2014), 안드로이드 계열 모바일 기기의 경우 구글플레이(Google Play)에, 애플 계열의 경우 앱 스토어(App Store)에 접속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검색해 손쉽게 설치할 수 있다.

둘째, 이번 인터뷰를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재난안전정보의 필요성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안전사고 관련 응급처치 요령이나 재난대비 물품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있었다. 또한 국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재난 후 피해를 입었을 때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따라서 이들의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재난대비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난안전정보에 대한 비언어적이며 보다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그림, 동영상, 만화 등 다양한 기호와 매체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재난취약계층일 수밖에 없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언어적 장애와 문화적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발굴된 재난안전 콘텐츠에 대한 다국어 지원은 필수적이다. 미국은 물론, 대부분의 유럽 국가의 경우 기본적으로 2개 언어 이상으로 재난안전정보가 제공되는 반면, 국내 재난안전콘텐츠는 거의 한국어로만 제공되어 국내 거주 외국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인터뷰에서 나타났듯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문자로 기술된 재난안전콘텐츠보다는 그림, 만화 등의 시각적 매체를 통해 재난안전정보를 제공받고 싶어 하는 점 역시 모국어로 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운 여건 때문임을 짐작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영어와 스페인어로 재난안전정보가 제공되며, 카운티에 존재하는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다수의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로 재난안전 콘텐츠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주정부의 웹사이트는 자동번역 기능을 사용하여 주정부의 업무내용을 다국어로 알리는 경우도 많다. 향후 국내 거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재난대비 및 안전사고 관련

다국어 콘텐츠 제공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소방방재청(현 국민안전처)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다문화 출신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12가지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처요령을 담은 동영상 ‘미녀들의 골드타임(2014)’을 DVD로 제작해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남북하나재단 등에 배포하기 시작했다. 이 동영상은 국내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5개국(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태국)과 북한이탈주민들의 현지어와 자막을 삽입해 한국어에 익숙지 못한 이들에게 119 이용방법, 화재 진화를 위한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요령 등의 생활안전 정보는 물론 태풍, 호우, 대설 등과 같은 자연재난 발생시 대처 요령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서울신문, 2014).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재난안전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민방위 훈련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에 확대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이들 중 일부를 대상으로 시범훈련을 실시하는 데 그쳤다면, 향후에는 이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 훈련 및 훈련방식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난안전 교육과 관련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센터, 하이코리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기존 한국어 교육 및 문화교육 프로그램에 필수적인 재난안전정보교육을 한 두 개의 강좌로 포함해 진행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제도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인 대상 재난안전 관리 강사풀 확보 및 교육 커리큘럼 개발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스물 두 명의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연구 결과가 국내 거주 외국인 대다수의 의견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표본의 대표성 결여’라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인권센터 등을 통해 인터뷰 참여자를 모집함으로써 표본의 상당수가 결혼이주여성들로, 전체 인터뷰 대상자 중 남성이 5명에 불과해 성비 불균형이 있고, 중국 출신 외국인이 과대대표(over-representation)되어 실제 이주민의 출신 국가별 분포 비율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 분야의 질적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연구는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분야 후속 연구를 확대시키는 데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동시에 심층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는 향후 국내 거주 외국인의 재난안전정책 방향과 관련해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도움이 되는 재난안전정보 및 콘텐츠 개발, 맞춤형 전달방식 및 채널 다각화, 현존하는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방안 개발이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재난안전 관리 후속 연구는 설문이나 인터뷰 대상의 표본 크기를 대폭 확대하고, 본 연구에서 누락된 미국이나 캐나다 등 북미권 그리고 영국, 프랑스 등 유럽권 출신 외국인의 의견까지 수렴할 수 있도록 표본 집단을 재구성해 보다 심층적이고 포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수돌. 1996.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관리 실태와 정책대안. 한국노동연구원.

경향신문. 2014. 국립재난안전연구원 3일 외국인 전용 세이프티 앱 출시. 2014. 11. 2일자.

공수연, 양성은. 2014. 중국국적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준비 경험에 대한 과정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1): 133-150.

구건서. 2003.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체계. 현상과 인식.

국민일보. 2014.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처음으로 150만 명 돌파. 2014. 7. 2일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3. 안전약자 유형별 생활안전 콘텐츠 발굴.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제적십자자연맹 <http://www.ifrc.org>.

그레이스정, 임지영. 2011. 결혼이주 여성과 한국인 여성의 결혼만족도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9(5): 33-48.

김경화, 최정혜. 2011. 제2장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와 대처. 가족 건강성에 관한 연구. 중등교육연구. 23: 29-48.

김기홍 외. 2011.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명성. 2009. 사회통합 차원에서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실천. 8: 5-29.

김성찬, 김유정. 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법학연구. 43: 319-344.

김승권. 2010. 한국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정책적 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대. 2009. 외국인 근로자들의 일상적인 건강장애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9): 268-277.

김유경. 2008.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윤영, 김정규. 2013.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 폭력피해 방지를 위한 경찰활동 방안: 제주지역을 표본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0(3): 23-44.

김이수. 1998. 외국인노동자 고용에 관한 연구. 국제·경영연구. 8: 169-199.

김종열, 김창호, 하정훈. 2013. 외국인 노동자 관련 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안전교육학회지. 9(1): 113-135.

김철효, 설동훈, 홍승권. 2006. 인권으로서의 이주노동자 건강권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학. 7(2): 93-129.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홈페이지(<http://www.dj199.go.kr>).

류현숙, 박선주, 홍승희. 2012. ICT를 활용한 다문화 복지서비스의 쟁점과 개선방안. 입법과 정책. 4(2): 135-165.

- 마경희 외. 2011. 범부처 다문화사회 정책예산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래영. 1993.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관한 조사연구. 노동경제논집. 16: 1-28.
- 박명호, 권장수. 2005. 이주노동자 현황 및 개선방안. 복지행정논총. 15(2): 221-260.
- 박영범. 1992. 외국인력 수입과 정책방향: ILO협약과 국내 노동시장문제. 한국노사관계발전연구소.
- 박종대, 박지해. 2014. 한국 다문화정책의 분석과 발전 방안 연구. 문화정책논총. 28(1): 35-63.
- 박진완. 2012.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주체성과 이민정책. 헌법학연구. 18(3): 1-42.
- 박진찬 외. 2013. 외국인의 재난안전 서비스에 관한 의식조사. 한국화재소방학회 2013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변화순. 2008. 한일법학회 제6회 공동심포지움: 사회변화에 따른 한일양국의 가족가족법(가족법의 변동 요인과 과제): 가족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가족법의 변화와 전망. 한일법학. 25-26: 249-267.
- 설동훈. 2002. 외국인노동자 지원 시민단체 10년간의 쟁점과 과제. 시민사회. 6(봄호): 34-46.
- 서울신문. 2014. 다문화·새터민들 대상 재난 대처 동영상 제작. 2014. 10. 3일자.
- 설동훈. 2005. 외국인노동자와 인권: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기본권' 및 '인간의 기본권'의 상충요소 검토. 민주주의와 인권. 5(2): 39-77.
- 설동훈. 2007. 국제노동력이동과 외국인 노동자의 시민권에 대한 연구: 한국·독일·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7(2): 369-419.
- 송병준. 1993. 산업인력의 수급원활화 방안: 외국인력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 안전행정부. 2014. '201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안전행정부.
- 어수진. 2011. 협동학습을 통한 다문화 가정의 한국어 교육방안 연구: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세계한국어문학. 5: 133-174.
- 오세연, 곽영길. 2010.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7(2): 285-309.
- 원숙연. 2008. 다문화주의시대 소수자 정책의 차별적 포섭과 배제: 외국인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42(3): 29-49.
-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http://www.unocha.org>
- 윤인진, 김숙희. 2009. 국내탈북자의 건강 및 의료. 보건과 사회과학. 17: 149-182.
- 윤인진. 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2): 72-103.
- 이광택. 2004.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보호. 법학논총. 16: 113-149.
- 이은애. 2008. 재난발생시 재해약자지원시스템 구축 방향: 일본시스템을 중심으로. 방재연구. 10(4): 29-32.
- 이정환, 이성용. 2007.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 특성과 연구동향. 한국인구학. 30(2): 147-168.
- 이주연 외. 2011.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여가생활 변화 인식과 삶의 만족감에 대한 연구. 한국여가레

- 크리에션학회지. 35(4): 83-97.
- 이현심. 2014. 다문화가정 여성결혼이주자의 한국생활 어려움에 관한 질적 연구. 농촌지도와 개발. 21(1): 143-176.
- 이혜경. 1994.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28: 89-113.
- 장재열. 2010.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복지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중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준오. 2002. 불법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적응실태와 문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진숙. 2010. 결혼이주여성의 법적 지위와 인권. 교정복지연구. 20: 73-93.
- 장현주. 2011. 다문화가정 이주자의 합리적 선택과 현실. 한국공공관리학보. 25(4): 189-213.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2.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조사 동향/연구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 전영평, 한승준. 2006. 소수자로서 외국인노동자: 정책 갈등 분석. 한국행정연구. 15(2): 157-184.
- 정광호 외. 2011.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회서비스 전달과정 분석: 위탁과 바우처 방식의 비교. 한국공공관리학보. 23(4): 231-255.
- 정병호. 2004. 탈북 이주민들의 환상과 부적응. 비교문화연구. 10(1): 33-62.
- 정지범 외. 2010. 재난에 강한 사회시스템 구축. 서울: 법문사.
- 정진경. 2005. 외국인 노동자가 느끼는 차별이 한국에 대한 태도와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연구재단.
- 정현미. 2010. 결혼이민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화젠더법학. 1(1): 71-102.
- 조혜영 외. 2007.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실태와 교사·학생의 수용성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석현. 2013. 다문화 사회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딜레마. 경기개발연구원.
- 최연실. 2011. 다문화가족의 복지욕구와 복지서비스의 현황 분석 및 통합적 개선방안 탐색.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9(3): 61-95.
- 최영신. 2007. 외국인의 불법체류와 외국인범죄. 형사정책연구. 18(3): 1319-1340.
- 최영신, 강석진. 2012.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와 치안실태 연구. 형사정책연구. 9: 1-300.
- 코나스. 2011. 전 국민 지진대비 훈련 실시. 2011. 5. 4일자.
- 파이낸셜 뉴스. 2014. 제52주년 소말의 날 기념식 개최, 유공자 5명 정부포상. 2014. 11. 7일자.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주한 외국인 부문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승준. 2008. 다문화사회 이행단계별 거버넌스 전략에 관한 연구. 국정관리연구. 3(2): 99-122.
- 한승준, 박치성. 2011. 외국인 정책의 사회적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0(1): 51-82.
- 함한희. 1997. 외국인 노동자의 갈등과 적응. 고려대학교노동문제연구. 13: 1-31.
- 허철행. 2012. 다문화가정의 결혼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5(4): 201-228.
- Cardona, O. D., J. E. Hurtado, G. Duque, A. Moreno, A. C. Chardon, L. S. Velás-quez, and S. D.

- Prieto 2003. *The Notion of Disaster Risk. Conceptual Framework for Integrated Risk Management*. IADB/IDEA Program on Indicators for Disaster Risk Management, Universidad Nacional de Colombia, Manizales, available at <http://idea.manizales.unal.edu.co/ProyectosEspeciales/adminIDEA/CentroDocumentacion/DocDigitales/documentos/01%20Conceptual%20Framework%20IADB-IDEA%20Phase%20I.pdf>.
- Ehreinreich, J. H. 2001. *Coping with Disasters: a Guidebook to Psychosocial Intervent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Flanagan Barry E, Edward W. Gregory, Elain J. Hallisey, Janet L. Heitgerd, and Lewis Brian. 2011. A Social Vulnerability Index for Disaster Management. *Journal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Management*. DOI: 10.2202/1547-7355.1792.
- I.Garcia-Ortega, S. Kutcher, W. Abel, S. Alleyne, N. Baboolal, and S. Chehil. 2012. Support for Vulnerable Groups Following a Disaster. 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eds.)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in Disaster Situations in the Caribbean: Core Knowledge for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Washington, D.C.: PAHO.
- Manyena, S. B. 2006. The Concept of Resilience Revisited. *Disasters*. 30(4): 433-450.
- Tanaka, T. 2014. *Information Needs of Foreign Nationals Residing in Japan in Case of Tokyo Inl and Earthquakes: from Group interviews with Foreign Residents from Four Countries*. N HK Broadcasting Culture Research Institute. Mdeia Research & Studies. [http://www.nhk.or.jp/brunken/summary/research/report/2014\\_09/20140901.pdf](http://www.nhk.or.jp/brunken/summary/research/report/2014_09/20140901.pdf).
- Vakis, R. 2006. *Completing Natural Disasters Management: the Role of Social Protection*. Social Protection Discussion Paper. No. 0543.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SOCIALPROTECTION/Resources/SP-Discussion-papers/Social-Risk-Management-DP/0543.pdf>.
- Wisner, B., P. Blaikie, T. Cannon, and I. Davis. 2004. *At Risk: Natural Hazards, People's Vulnerability and Disasters, 2nd*. London: Routledge.

---

**김윤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통합적 위기관리 및 재난관리 정책연구를 담당하였다.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교에서 위기관리(Crisis, Emergency and Risk Management)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관심분야는 위기관리 교육훈련, 국가 재난관리 정책, 재난약자 정책 등이다(younhkim@gmail.com)

**류현숙**: 현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재직 중이며,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정책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관심분야는 ICT 정책, 갈등관리, 재난안전 관리, 정부개혁 등이다(hslyu@kipa.re.kr).